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李 선거 유세 중 그릇 던져...“시끄러워서” 1심 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양형 부당’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까

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유세에 나선 이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그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은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범의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환기자



해양경찰, 신임경찰과정 학생들의 바다로함 실습교육 성료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첫 입교생인 제247기 신임경찰과정 학생들의 바다로함 실습교육을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지방보훈청, ‘군 전직지원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3월 30일 광주, 전남 북부 지역 군 전직지원담당,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장, 호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관계를 초대해 ‘군 전직지원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유나기자



강진소방, 어린이 임야화재 드론감시단 운영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3월 29일 강진대구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임야화재 드론감시단(D.P☆)을 발대하여 봄철(3월 ~ 5월)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4월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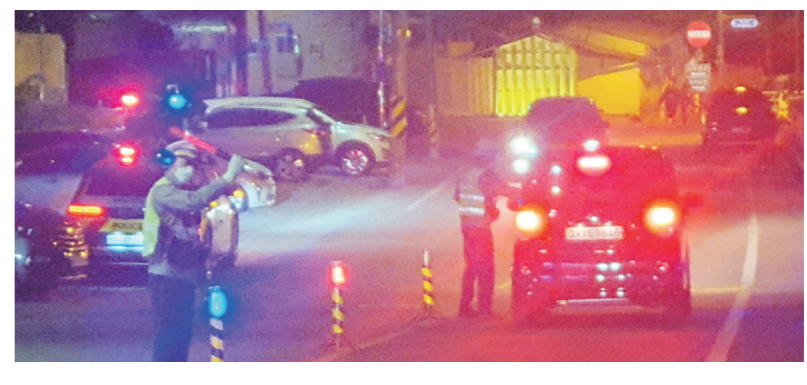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남부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지난 3월 30일 남구 효천하수처리장에서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나주경찰, 음주단속 TF팀 54일간 48건 단속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여 나주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 총 48건을 단속 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제보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신원 비밀을 보장받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인과 술자리 중 다쳤음에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해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 배액환수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노동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전부 환수하고 수급자를 고발했다.
이같은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02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4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선의의 산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지만,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올해 지역축제 1129건, 26%가 4~5월 열려…‘사고 주의보’

5년來 지역축제서 30명 피해… 행안부, 안전요령 안내

올해 지역축제의 약 26%가 봄꽃이 만개하는 4~5월중 열릴 것으로 예정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돼 방역 제한이 사라진 올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거나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는 1129건이다. 이는 지난해의 944건보다 19.6%(185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4~5월중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292건으로 25.9%를 차지한다. 4월 137건, 5월 155건이다.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강원 삼척 맹방유채꽃축제, 강원 영월 단종문화제, 경북 영주 소백산 철쭉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보면 조사 응답자의 67%가 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장 내 안전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해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17~2021년 5년간 관람객 3000명 이상이 다녀간 대형 지역축제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3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8명, 2017년 7명 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2020~2021년 2년간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
축제·공연장에 입장할 때에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배지 안내도를 미리 살펴보고 비상대피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행사 참여 시에는 안전요령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한다. 특히 이동 시 앞사람과의 안전 거리를 지키고 떠밀지 말아야 한다.
공연장에서는 시야 확보를 위해 관람석 이외 높은 곳이나 물건 등을 밟고 올라서지 않아야 하며 정해진 안전선 밖으로는 다니지 않아야 한다. 야간 시간대 폭죽 등의 개별적 사용을 자제하고 시설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나 줄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

등반 시에는 보호자와 늘 함께해야 한다.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권장 나이와 키 제한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안전요령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축제장 인근은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승·하차 또는 길을 건널 때는 유의해야 한다.
조상병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장 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하늘에서 피자가 내려와’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에서 드론이 피자를 신고 착륙하고 있다. 드론으로 배달된 피자는 ‘로봇개’를 통해 주문자에게 전해진다.

대출 사기범에게 압수영장 보낸 수협 직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선박 건조 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지인에게 압수영장을 보낸 수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협에서 일할 당시인 2017년 8월 11일 선박 건조 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던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사진 촬영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관련된 대출 명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해달라’는 해경의 요청을 받은 직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견적서를 부풀려 대출받은 돈을 조선소로부터 되돌려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 조선소에서 되돌려준 거래 내역이 있으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말한 뒤 영상 사진 촬영본을 보내 B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8월 24일 선박 건조 견적서의 계약금이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C씨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줘 수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금융기관 직원 임무를 위해 과다 대출을 하고, 임무 위배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인 B씨에게 알려줬다. 과다 대출에 따른 기관의 손해 정도, A씨가 범인도피와 금융거래 내용 제공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